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219-231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5

연구보고

부당한 권위를 따르기 위한 우파권위주의자의 동기화된 추론*

전 서 영　　나 진 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지난 10년 사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대두됨에 따라, 우파권위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위에 복종하는 우파권위주의의 경향성이 권위의 판단이 정의롭지 않음을 알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성인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을 응답한 참가자는 두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통제조건과 달리, 실험조건 참가자는 권위자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자의 부당한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의 부당함을 인식한 다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추가 정보를 검토한 뒤에는 피해자 비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자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가 스스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권위조차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우파권위주의, 동기화된 추론, 권위

* 이 논문은 재단법인 止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상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우파권위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Osborne et al., 2023). 우파권위주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가 지목한 대상에 공격적이며, 사회 관습을 중시하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는 개념으로(Altemeyer, 1996),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개인은 정의롭지 못한 권위에 대하여 높은 파괴적 복종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occhiaro & Zimbardo, 2017; Lepage et al., 2019; Petersen & Dietz, 2000).

그러나 권위와 우파권위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권위의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권위의 효과가 아니라 우파권위주의의 고유한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파권위주의의 파괴적 복종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가자로 하여금 부당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권위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에 정의롭지 않을 때에도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탐구한다.

민주주의 위기와 우파권위주의

지난 10년 사이 선거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세계 시민의 평균 민주주의 수준이 40년 전으로 회귀하였으며(V-Dem Institute, 2025), 자유 지표도 19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Freedom House, 2025).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V-Dem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로 지목하며,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정부 허위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된 12·3 비상계엄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저해한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현상은 권위가 정의롭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는 현상이다. 그 예로, 국회에 군경이 투입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동시적으로 송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은 권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Newman et al.(2021)에 따르면 편견적인 정치 엘리트의 연설이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기존에 편견이 적은 사람들과 달리, 이미 편견이 높은 사람들만이 연설 이후 편견 표현과 행위가 증가했다. 이와 비슷하게 Ruisch와 Ferguson(2022)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가 인종 및 종교적 편견을 더 많이 표출한 반면, 트럼프 반대자의 편견 표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정치적 권위자의 편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권위의 부당함에 대한 반응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Osborne et al.(2023)은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배경으로 대중 속에서 다시 등장한 권위주의를 언급하며, 우파권위주의가 민주주의 이상을 훼손하고 폭력을 부추길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파권위주의는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Adorno et al.(1950)의 권위주의 성격 이론에 기반을 두고 Altemeyer(1996)가 제안한 개념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위에 순응하고, 권위가 지목하는 대상에 공격적이며, 사회 관습을 중시하는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된다.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개방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으며(Perry & Sibley, 2012; Sibley & Duckitt, 2013),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Cohrs & Ibler, 2009; Feldman & Stenner, 1997). Duckitt(2001)의 이중 과정 동기 모델(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은 이러한 우파권위주의의 선행요인 및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중 과정 동기 모델에 따르면, 낮은 개방성과 높은 성실성 같은 성격 특성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적이라는 위험한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위험한 세계관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순응으로 내집단 가치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동기를 유발하여 우파권위주의로 반영된다(Duckitt, 2001; Duckitt et al., 2002; Osborne et al., 2023).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하여 권위자가 직접 선전과 허위정보, 검열 등 무기화된 언어로써 적극적으로 사회적 위협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Pascale, 2019),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의 우파권위주의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권위와 우파권위주의

특히 본 연구는 정의롭지 않은 권위자의 요구에 대한 파괴적 복종(destructive obedience)에 주목한다.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자의 정의롭지 않은 요구에 더 많이 복종한다는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윤리적으로 우려되는 실험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요청하거나(Bocchiaro & Zimbardo, 2017), 가상의 인물에게 전기충격을 주도록 요구할 때(Lepage et al., 2019) 거부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권위와 우파권위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순히 권위의 요구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을 살폈을 뿐, 그 행동이 권위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단지 개인의 기존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Petersen과 Dietz(2000)는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차별적 지시에 더 잘 따른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때 참가자가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집단 구성원을 덜 채용한 우파권위주의자의 결정이 개인의 고유한 차별적 가치관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권위의 지시에 복종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부당한 권위를 인식하도록 실험을 설계함으로써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를 따르는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권위가 정의롭지 않음을 인식할 때에도 여전히 권위를 따르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Haslam과 Reicher(2017)는 사람들이 권위자의 비윤리적인 지시에 협조하는 이유가 권위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Cohen et al.(2007)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내집단의 주류 의견과 다르다는 인식은 집단 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Cohen et al., 2007; Kahan, 2013), 사람들은 권위자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을 알 때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개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중 과정 동기 이론에 따르면, 우파권위주의자는 위험한 세계관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순응으로 내집단 가치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동기를 가진다(Duckitt,

2001; Duckitt et al., 2002; Osborne et al., 2023). 이처럼 우파권위주의자에게 있어서 권위에의 복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 추구 전략이기 때문에 권위와 대립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자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며, 우파권위주의가 높을수록 권위의 부당한 결정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파권위주의가 높을수록 권위의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범죄 가해자에게 참가자의 생각보다 훨씬 부족한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제시하고 우파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이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참가자에게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범죄 시나리오 속 가해자가 얼마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그 후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 양형기준보다 약한 기소유예였음을 알림으로써 참가자가 권위의 결정을 부당하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위자의 존재나 지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권위에 대한 복종은 권위가 있는 개인의 직접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상황적 단서에 따른 반응까지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Gibson, 2019; Milgram, 1974). 본 연구는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제시했고, 현행 국내 제도상에서 이러한 상황은 제도화된 권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사법 맥락에서 사법관이 내린 결정은 권위로서 부족하지 않은 자극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음으로,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권위의 부당한 결정을 수용하는지를 살핀다. 부당한 권위에 따를 의향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요구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권위자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 행동 지표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거나(Loseman & van den Bos, 2012) 가볍게 처벌될 때(Sullivan et al., 2016)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Hafer & Begue, 2005; Lerner, 1980). 마찬가지로, 우파권위주의자가 가해자에게 약한 처분을 내린 권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이는 더 높은 피해자 비난으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권위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예상보다 약한 처분을 내릴 때,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피해자를 더 비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파권위주의자가 부당한 권위를 정당화하는지를 살핀다. 참가자가 권위의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이후 새롭게 접하는 정보는 권위가 내린 결정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다.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편향적인 정보 처리로 이어지고(Kunda, 1990), 사전 신념 효과,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등은 이러한 동기화된 추론에 관여하는 주요 인지 메커니즘이다(Druckman & McGrath, 2019; Strickland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정보 검토 전후로 피해자 비난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만일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검토한 뒤 피해자 비난이 증가한다면, 이는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정보를 해석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권위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예상보다

약한 처분을 내릴 때,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정보 검토 이후 피해자를 더 비난할 것이다.

사전 조사

사전 조사의 목적은 본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시나리오와 추가 정보를 선정하는 것이다. 참가자가 권위의 결정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추가 정보를 검토한 이후 피해자 비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 정보가 피해자 비난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중립적인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학부생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이 중 주의 점검 문항에 통과하지 못한 참가자 11명을 제외한 최종 참가자 92명(남 31, 여 61)의 평균 연령은 23.17세(SD = 1.93)였다. 조사관으로서 네 시나리오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안내받은 참가자는 실제 사기죄 판례를 각색한 네 개의 시나리오(고의 사고, 보이스피싱, 혼인 빙자, 투자 사기)를 읽고 각 시나리오의 피해자에게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그 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정보를 새로 알게 되었다고 안내받고, 각 정보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류한 다음 다시 한 번 피해자 비난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 제시 전후로 피해자 비난 정도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JZS 사전분포(Rouder et al., 2009)를 적용하여 베이지안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Jeffreys(1961)의 기준에 따르면, 베이즈 요인(BF01)으로 영가설 지지 정도를 판단할 때 10보다 큰 값은 강한 증거를, 3에서 10 사이의 값은 보통 증거를, 1/3에서 3 사이의 값은 일화적 증거를 의미한다. 1/3보다 작은 값은 대립가설에 대한 증거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고의 사고'(BF01 = 8.59)와 '혼인 빙자'(BF01 = 4.22)에서 추가 정보 제시 전후로 피해자 비난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영가설에 대한 보통 증거가 나타나 두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추가 정보가 실험에 사용될 만큼 충분히 중립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의 사고' 시나리오는 초기 피해자 비난 점수 평균이 7점 척도에서 2.33점(SD = 1.23)으로 매우 낮고, 왜도 1.27의 심한 우편향 분포를 보여, 바닥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되었다. '혼인 빙자' 시나리오는 초기 피해자 비난 점수가 평균 3.08점(SD = 1.16)이고, 왜도 0.27로 Shapiro-Wilk 검정 결과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여 (W = 0.98, p = 0.104), '혼인 빙자'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SGUIRB-A-2502-14) 국내 조사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20-60대 한국인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주의 점검 문항에 통과하지 못한 참가자 13명을 제외한 최종 참가자 267명(남 137, 여 130)의 평균 연령은 42.50세(SD = 11.60)였다. G*Power 프로그램 3.1.9.6 버전에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측변인 3개의 선형 다중회귀 분석에서 267명은 신뢰수준 .05와 검정력 .80에서 f^2 = .04의 효과크기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크기로 확인되었다.

절차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는 연수를 받고 있는 예비 조사관으로서 과거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문을 읽고 사전 조사에서 선정된 혼

인 빙자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모든 참가자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받고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개방형으로 응답한 다음, 실험조건과 통제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는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조작 확인 문항에 7점 척도(1 = 매우 정의롭지 않다, 7 = 매우 정의롭다)로 응답했다. 이와 달리, 통제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는 가해자가 받은 처분에 대한 정보와 조작 확인 문항을 제공받지 않았다. 이후 모든 참가자는 피해자 비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정보를 새로 알게 되었다고 안내받은 다음, 각 정보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류하고, 이전과 동일한 피해자 비난 문항에 다시 응답했다. 이어서 통제변인과 우파권위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을 작성한 참가자는 실제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보상을 받았다.

측정 도구

시나리오

Y와 Z는 결혼을 위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한 Z는 자신의 연 수입이 1억 원이 넘고 서울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 말하며 Y의 호감을 샀다. Y와 Z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느 날 Z는 Y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나 대신 피해자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달라. 돈은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며 Y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로도 Z는 Y에게 "교통사고 상대방 측에서 자신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상대 차량 렌트비, 변호사 선임비, 추가 합의금 등 총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Y는 Z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사실 Z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으며, Y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Y가 이를 눈치챈 것은 Z가 "동료 치과의사의 결혼선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먼저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대신 결제했다가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Z의 전화번호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사건에 대한 주변적인 정보 10가지로 구성되었다. 예시 항목은 'Z가 Y에게 알려준 교통사고 피해자 계좌는 Z의 모친 계좌다,' 'Y가 Z의 행각을 알게 된 때는 2023년 8월 중순이다.'이다.

피해자 비난

피해자 비난 문항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인상,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포함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후로 두 번 측정되었다. 피해자의 책임은 van den Bos와 Maas (2009)에서 사용된 5문항(예시: Y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인상은 Y에 대한 참가자의 평가를 묻는 6문항(예시 : 어리석다)을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인상은 단일 문항인 '귀하는 전반적으로 Y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7점 척도(1 = 매우 부정적, 7 = 매우 긍정적)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피해자 비난을 의미하도록 필요한 문항을 역채점하고 평균내어 초기(Cronbach's α = .83)와 후기(Cronbach's α = .84) 피해자 비난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피해자 비난 증가량은 두 점수의 차로, 값이 높을수록 추가 정보 검토 후 피

해자 비난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사건 관련 변인

본 연구는 구체적인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피해자와의 유사성과 사건에 대한 친숙성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피해자와의 유사성은 '나는 Y와 비슷한 사람이다,' '나도 Y에게 일어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문항을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사건에 대한 친숙성도 2문항으로 '나는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을 많이 들어보았다'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친구나 가족에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응답을 받았다.

우파권위주의

우파권위주의는 Rattazzi et al.(2007)의 7문항을 7점 척도(1 = 전적으로 반대, 7 = 전적으로 찬성)로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은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이다(Cronbach's α = .77).

인구통계학적 변인

대상자 선별을 위해 수집한 성별 및 연령과 함께, 정치 성향과 주관적 계층, 객관적 계층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정치 성향은 단일 문항 7점 척도(1 = 매우 진보적, 7 = 매우 보수적)로 측정했고, 주관적 계층은 참가자에게 10개 칸으로 이루어진 사다리 이미지를 제시하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어느 칸에 위치하는지를 응답하게 했다. 객관적 계층은 교육 수준과 개인 및 가정 소득을 측정하였다.

결 과

조작 확인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량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서 가해자가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실험조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정의로운지를 묻는 문항에는 136명 중 133명이 척도의 중간값보다 낮게 응답했다(M = 1.35, SD = 0.75, $t(135)$ = -41.40, p < .00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초기 피해자 비난이 높을수록 추가 정보를 살핀 후 피해자 비난 증가량이 낮았다, r = -.30, p < .001. 그리고 우파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초기 피해자 비난이 높았다, r = .24, p < .001. 반면, 우파권위주의와 피해자 비난 증가량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 = .07, p = .287. 이어서 주요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남성이고, r = -.25, p < .001, 연령이 높을수록, r = .23, p < .001, 초기 피해자 비난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이고, r = -.18, p = .003,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r = .19, p = .002. 우파권위주의가 높았다.

우파권위주의와 초기 피해자 비난의 관계에서 부당한 권위의 조절효과

먼저, 권위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예상보다 약한 처분을 내릴 때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피해자를 더 비난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했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2)의 Model 1에서 종속변인에 초기 피해자 비난, 독립변인에 우파권위주의, 조절변인에 조건(1 = 실험조건, 0 = 통제조건)을 두었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정치 성향, 주관적 계층, 객관적 계층, 피해자와의 유사성, 사건에 대한 친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N = 267)

	1	2	3	4	5	6
1. 초기 피해자 비난	-					
2. 피해자 비난 증가량	-.30***	-				
3. 우파권위주의	.24***	.07	-			
4. 성별	-.25***	.08	-.18**	-		
5. 연령	.23***	-.03	.08	-.32**	-	
6. 정치 성향	.06	.05	.19**	-.01	-.07	-
M	4.38	0.08	4.07	0.49	42.50	3.87
SD	0.82	0.56	1.00	0.50	11.60	1.09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0 = 남성, 1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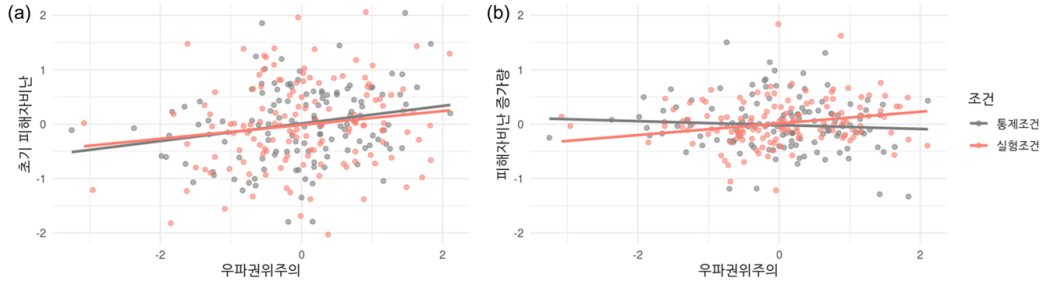


그림 1. 우파권위주의와 (a) 초기 피해자 비난, (b) 피해자 비난 증가량의 관계에서 조건의 조절효과

숙성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우파권위주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 = 0.16, SE = 0.07, p = .028, 95% CI [0.02, 0.30]. 즉, 우파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했다(그림 1-a). 하지만 조건의 주효과와, b = 0.07, SE = 0.41, p = .857, 95% CI [-0.72, 0.87], 우파권위주의와 조건의 상호작용은, b = -0.02, SE = 0.10, p = .799, 95% CI [-0.21, 0.1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예상보다 약한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곧바로 피해자를 비난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우파권위주의와 피해자 비난 증가량의 관계에서 부당한 권위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권위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예상보다 약한 처분을 내릴 때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이 정보 검토 이후 피해자 비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2)의 Model 1에서 종속변인에 피해자 비난 증가량, 독립변인에 우파권위주의, 조절변인에 조건(1 = 실험조건, 0 = 통제조건)을 두었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정치 성향, 주관적 계층, 객관적 계층, 피해자와의 유사성, 사건에 대한 친숙성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우파권위주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0.04, SE = 0.05, p = .398, 95% CI [-0.15, 0.06],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 = -0.63, SE = 0.30, p = .037, 95% CI [-1.21, -0.04].

더 중요한 결과로, 우파권위주의와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 = 0.16, SE = 0.07, p = .024, 95% CI [0.02, 0.30].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조건별로 우파권위주의가 피해자 비난 증가량을 예측하는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제조건에서는 우파권위주의가 피해자 비난 증가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은 반면, b = -0.04, SE = 0.05, p = .398, 95% CI [-0.15, 0.06], 실험조건에서는 우파권위주의가 피해자 비난 증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b = 0.12, SE = 0.05, p = .020, 95% CI [0.02, 0.22].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권위의 부당한 판단을 접한 우파권위주의자가 정보를 검토하면서 피해자를 더 비난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결과(그림 1-b)는 권위의 판단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였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개인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인식한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우파권위주의가 높은 개인이 부당한 권위에 더 복종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해 왔으나, 그 이유가 우파권위주의자가 부당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지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식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가 권위를 부당하게 인식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하고 그 결과를 권위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통제조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부당한 권위를 정당화하는 우파권위주의자의 경향성이 초기 피해자 비난에서가 아니라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높은 우파권위주의자도 정당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구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기가 유발하는 편향의 크기가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결론을 구성하려는 인지 과정에 의해 조절된다는 Kunda(1990)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다. 그렇다면 인식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동기를 갖는 까닭은 무엇인가? Duckitt(2001)의 이중 과정 동기 모형에 따르면, 우파권위주의자가 권위에 복종하는 바탕에는 위험한 세계관에서 불안을 관리하려는 동기가 있다. 권위의 지시를 따르며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들에게 있어서 권위와의 대립은 커다란 심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 비난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동기(need to believe in a just world)에 따른 대표적인 반응으로(Hafer & Begue, 2005; Lerner, 1980), 그중에서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 비난을 더욱 증가시킨다(Loseman & van den Bos, 2012; Sullivan et al.,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권위자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상황은 특히 우파권위주의자에게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하여 정당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가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실험 조작 및 조작 점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가 권위의 부당한 결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권위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하거나, 권위가 없는 사람이 부당한 판단을 내리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권위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새로운 비교조건을 설정하여 권위와 우파권위주의의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나타난 우파권위주의와 피해자 비난 증가량의 관련성이 권위에 반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비롯한다면, 권위와 자신의 입장이 일치하는 새로운 비교조건에서는 본 연구의 통제조건에서처럼 우파권위주의와 피해자 비난 증가량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우파권위주의자가 피해자에게 더 온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참가자의 우파권위주의를 마지막에 측정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고 피해자 비난에 응답하는 절차가 우파권위주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설문조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고조된 시기에 이루어져 우파권위주의 문항이 참가자를 정치적으로 점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우파권위주의를 먼저 측정하거나 역균형화를 실시하여 순서 효과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는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부여되지만, 역설적으로 권위 자체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가 부당한 권위를 따르기 위한 동기화된 추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부당한 권위가 정당화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관찰을 시도했다. 본 연구가 권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오늘날 대두되는 민주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전서영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 관심사는 불평등, 사회 계층, 체제정당화 신념 등이다. 현재 희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진경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문화, 사회계층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망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와 확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cchiaro, P., & Zimbardo, P. (2017). On the dynamics of disobedienc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defying unjust authority.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0,* 219-229.

Cohen, G. L., Sherman, D. K., Bastardi, A., Hsu, L., McGoey, M., & Ross, L. (2007). Bridging the partisan divide: Self-affirmation reduces ideological closed-mindedness and inflexibility in nego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415-430.

Cohrs, J. C., & Ibler, S. (2009). Authoritarianism, threat, and prejudice: An analysis of mediation and moder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1*(1), 81-94.

Druckman, J. N., & McGrath, M. C. (2019). The evidence for motivated reasoning in climate change preference formation. *Nature Climate Change*, *9*(2), 111-119.

Duckitt, J. (2001). A dual process cognitive-motivational theory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pp. 41-11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uckitt, J., Wagner, C., Du Plessis, I., & Birum, I. (2002). The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75-93.

Feldman, S., & Stenner, K. (1997). Perceived threat and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18*(4), 741-770.

Freedom House. (2025). Freedom in the world 2025: The Uphill Battle to Safeguard Rights.

Gibson, S. (2019). Obedience without orders: Expanding social psychology's conception of 'obedi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1), 241-259.

Hafer, C. L., & Begue, L. (2005). Experimental research on just-world theory: problems, developments, and future challenges. *Psychological Bulletin, 131*(1), 128-167.

Haslam, S. A., & Reicher, S. D. (2017). 50 years of "obedience to authority": From blind conformity to engaged followership.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3*(1), 59-78.

Hayes, A. F. (2012, February).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Jeffreys, H. (1961). *Theory of probabilit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endon Press.

Kahan, D. M. (2013). Ideology, motivated reasoning, and cognitive reflec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8*(4), 407-424.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Lepage, J., Bègue, L., Zerhouni, O., Courset, R., & Mermillod, M. (2019). Influence of authoritarianism, vagal tone and mental fatigue on obedience to authority. *Cognition and Emotion*, *33*(2), 157-172.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Loseman, A., & Van den Bos, K. (2012). A self-regulation hypothesis of coping with an unjust world: Ego-depletion and self-affirmation as underlying aspects of blaming of innocent victims. *Social Justice Research, 25*(1), 1-13.

Milgram, S. (1974). *Obedience to authority: An experimental view*. Harper & Row.

Newman, B., Merolla, J. L., Shah, S., Lemi, D. C., Collingwood, L., & Ramakrishnan, S. K. (2021). The Trump effec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emboldening effect of racially inflammatory elite communic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3), 1138-1159.

Osborne, D., Costello, T. H., Duckitt, J., & Sibley, C. G. (2023). The psychological causes and societal consequences of authoritarianism. *Nature Reviews Psychology*, *2*(4), 220-232.

Pascale, C. M. (2019). The weaponization of language: Discourses of ris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Current Sociology, 67*(6), 898-917.

Perry, R., & Sibley, C. G. (2012). Big-Five personality prospectively pred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1), 3-8.

Petersen, L. E., & Dietz, J. (2000). Social Discrimination in a Personnel Selection Context: The Effects of an Authority's Instruction to Discriminate and Followers' Authoritarianism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1), 206-220.

Rattazzi, A. M. M., Bobbio, A., & Canova, L. (2007).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23-1234.

Rouder, J. N., Speckman, P. L., Sun, D., Morey, R.

D., & Iverson, G. (2009). Bayesian t tests for accepting and rejecting the null hypothesi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6*(2), 225-237.

Ruisch, B. C., & Ferguson, M. J. (2022). Changes in Americans' prejudices during the presidency of Donald Trump. *Nature Human Behaviour*, *6*(5), 656-665.

Sibley, C. G., & Duckitt, J. (2013). The dual process model of ideology and prejudice: A longitudinal test during a global reces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3*(4), 448-466.

Strickland, A. A., Taber, C. S., & Lodge, M. (2011). Motivated reasoning and public opinion.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6*(6), 935-944.

Sullivan, A. C., Ong, A. C., La Macchia, S. T., & Louis, W. R. (2016). The impact of unpunished hate crimes: When derogating the victim extends into derogating the group. *Social Justice Research, 29*(3), 310-330.

V-Dem Institute. (2025). Democracy report 2025: 25 Years of Autocratization - Democracy Trumped?. University of Gothenburg.

Van den Bos, K., & Maas, M. (2009). On the psychology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Exploring experiential and rationalistic paths to victim blam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2), 1567-1578.

1 차원고접수 : 2025. 11. 03.
수정원고접수 : 2026. 02. 03.
최종게재결정 : 2026. 02. 2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219-231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5

Brief Report

When Authority Feels Wrong but Must Be Right: Motivated Reasoning in High-RWA Individuals

Seoyoung Jun **Jinkyu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In the past decade, democratic backsliding by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worldwide, drawing renewed attention to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Altemeyer, 1996). To examine whether and how high-RWA individuals support authorities they themselves judge to be unjust, we conducted a survey experiment with 267 Korean adults. Participants first read a scenario and indicated what they believed to be an appropriate sentence for the perpetrator. They were then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condition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but not in the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receive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the authority figure had imposed an unduly lenient sanction on the perpetrator. We predicted that high-RWA individuals would justify the authority's unjust decision, reflected in higher victim blaming. Results showed that high-RWA individuals did not automatically accept unjust authority. Their victim blaming, however, increased after they reviewed neutral case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y were motivated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in ways more favorable to the authority. These results imply that high-RWAs tend to support unjust authority even when they themselves perceive it as unjust.

Key words : right-wing authoritarianism, motivated reasoning, authority